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45호
2024. 2. 23.

- 2023년 건설수주 전년비 17.4% 감소한 189.8조원
- 민자사업 30주년,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정책 필요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2024.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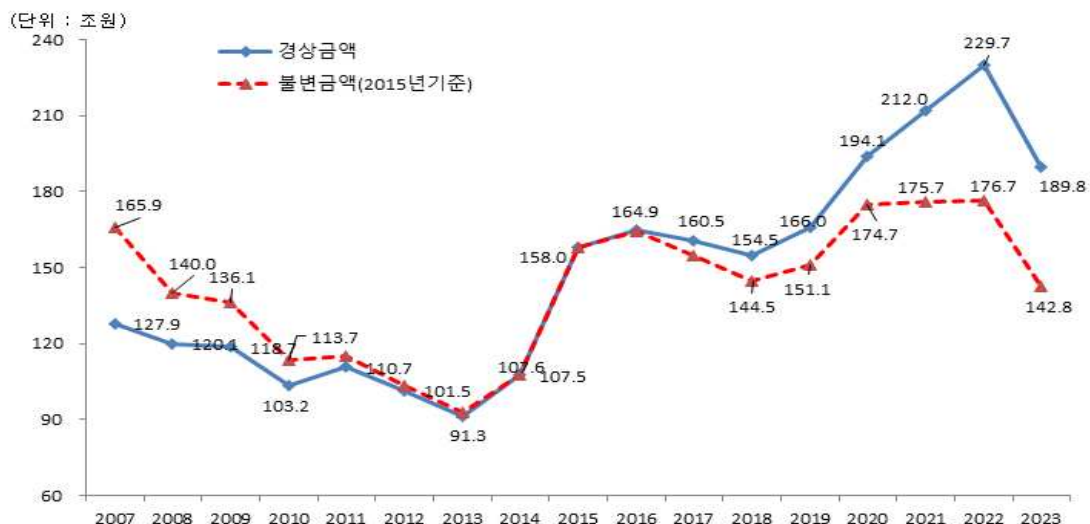
2023년 건설수주 전년비 17.4% 감소한 189.8조원

- 공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민간이 4년래 최저 실적 기록 -

■ 2023년 건설수주,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증가세 마감… 물가 감안하면 9년래 최저

- 지난해 건설수주는 지난 4년간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전년 대비 17.4% 감소한 189.8조원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2018년 154.5조원을 저점으로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9.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2023년에 17.4% 감소한 189.8조원을 기록함.
 - 물가를 감안한 불변금액(2015년 기준)으로는 142.8조원임. 9년래 최저치로 실질적으로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 2023년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한 것은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간수주가 30% 가까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공공수주의 경우 1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연말(12월)에 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98.9% 급등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3.1% 증가,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한편, 민간수주의 경우 2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기저효과로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을 제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대비 27.4% 감소함.

<그림 1> 국내 건설수주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수주) 전년 대비 13.1%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인 64.3조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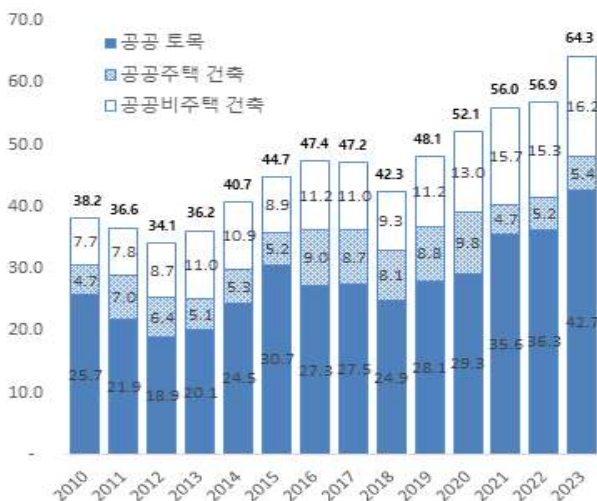
- 2023년 공공수주는 모든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대비 13.1% 증가함. 연간 실적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1994년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인 64.3조원을 기록함(<그림 2> 참조).
 - 공공 토목수주는 철도와 도로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역대 최대치인 42.7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17.5% 증가함.
 - 공공 주택수주는 5.4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3.0% 소폭 증가함.
 - 한편, 공공 비주택 건축수주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6.2조원을 기록함.

■ (민간수주) 전년 대비 27.4% 감소한 125.5조원, 4년래 최저치 기록

- 2023년 민간수주는 토목은 양호했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모두 부진하여 전년 대비 27.4% 감소한 125.5조원을 기록함(<그림 3> 참조).
 - 민간 토목수주는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 영향으로 역대 최대치인 27.0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9.5% 증가함.
 - 민간 주택수주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재건축과 신규주택 수주가 부진해 전년 대비 32.6% 감소한 54.4조원으로 5년래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함.
 - 한편, 민간 비주택 건축수주는 상업용 오피스 건물뿐만 아니라, 공장 및 창고 수주도 함께 감소해 전년 대비 34.5% 줄어든 44.2조원으로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함.

<그림 2> 공공 건설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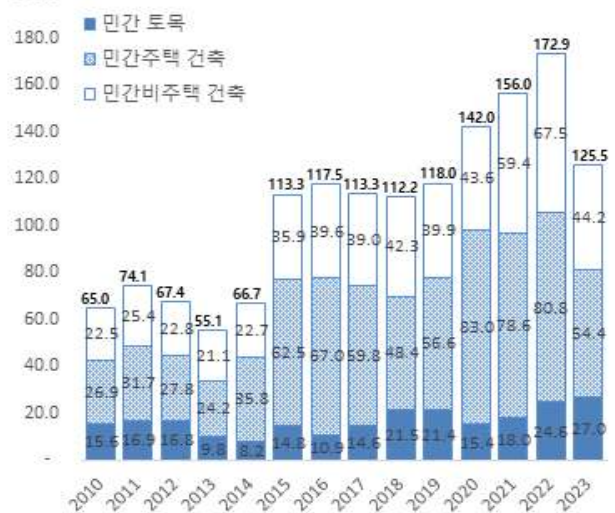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그림 3> 민간 건설수주

(단위 : 조원)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축 공종의 경우 재건축, 신규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등 부진

-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수주는 재개발과 관공서 수주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하였음(<표 1> 참조).
 - 신규주택 수주는 38.0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 줄었으며, 재건축 수주도 10.7조원으로 전년 대비 44.7% 감소함.
 - 다만, 재개발 수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서 관련 수주가 증가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17.1조원을 기록함.
 -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전년 대비 39.2% 감소한 17.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공장 및 창고 수주도 35.8% 감소한 21.2조원으로 부진하였음.
 - 한편, 관공서 수주가 15.0% 증가했지만, 기타 건축수주는 15.9% 감소해 부진했음.

<표 1> 2022년, 2023년 건축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조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등	기타 건축
	신규주택	재건축	재개발				
2022년	60.8	19.4	14.5	28.4	33.1	7.7	3.1
2023년	38.0	10.7	17.1	17.3	21.2	8.8	2.6
증감률	-37.4	-44.7	17.9	-39.2	-35.8	15.0	-15.9

주 : 잠정치로 정확한 수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 토목은 철도 및 궤도, 도로 및 교량, 발전 및 송전 수주 등이 전년 대비 증가

- 토목 공종의 경우 철도와 도로 수주가 크게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철도 및 궤도 수주의 경우 GTX 공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대형 철도 공사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1.6% 급등, 역대 최대 실적인 11.2조원 기록함.
 - 도로 및 교량 수주, 발전 및 통신, 치산 및 치수 수주도 각각 전년 대비 76.5%, 44.0%, 11.5%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기계설치, 토지조성, 상하수도 수주 등은 각각 전년 대비 4.6%, 27.0%, 0.8% 감소함.
 - 한편, 항만 및 공항, 그 외 기타 토목수주의 경우도 각각 39.7%, 34.0% 감소해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임.

<표 2> 2022년, 2023년 토목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조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기계설치	철도 및 궤도	도로 및 교량	발전 및 통신	토지조성	상하수도	치산 및 치수	항만 및 공항	그 외 기타 토목
2022년	19.0	4.1	5.7	5.8	6.6	2.6	1.3	1.8	2.5
2023년	18.1	11.2	10.0	8.4	4.8	2.5	1.4	1.1	1.7
증감률	-4.6	171.6	76.5	44.0	-27.0	-0.8	11.5	-39.7	-34.0

주 : 잠정치로 정확한 수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민자사업 30주년,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정책 필요

- 많은 성과에도 부정적 평가 존재, 사회·경제 발전 위한 합리적 추진 전략 필요한 때 -

■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참여 활성화 필요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힘. 핵심 인프라 구축 시 민간자본의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2024. 1. 24.)에 따르면 GTX-A, B, 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 E, F 신규 노선을 신설하며,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할 계획임.
 - 혁신전략을 추진하려면 약 134조원이 필요함. 그중 국비 30조원, 지방비 13.6조원, 공공기관 5.6조원, 신도시조성원가 반영 9.2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75.2조원은 민간자본에서 조달할 계획임.
 - 부산의 부두 재개발 사업, 서울 수처리시설의 전면 지하화, 각 지자체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민간의 자본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
- 시중의 유동성이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생산적 투자로 활발히 연결된다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 시중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M2(광의통화, 평잔)¹⁾ 추이를 보면, 2010년 1,639조원에서 2022년 3,722조원으로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함.
 - 시중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²⁾되는데, 민간의 자금이 교통, 환경, 복지, 문화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재원으로 활발히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 요소가 될 수 있음.

<표 1> 시중의 유동성(M2 광의통화) 추이

(단위 : 조원)

계정항목	2010	2015	2020	2021	2022
M2(평잔, 원계열)	1,639	2,182	3,070	3,430	3,722
가계 및 비영리단체 ¹⁾	932	1,165	1,559	1,673	1,823
기업 ²⁾	395	551	860	1,007	1,092
기타금융기관 ³⁾	242	358	478	562	598
기타부문 ⁴⁾	69	107	171	187	208

주 : 1)가계 및 가계의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등, 2)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 3)예금취급기관 이외 금융기관(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기관 등), 4)사회보장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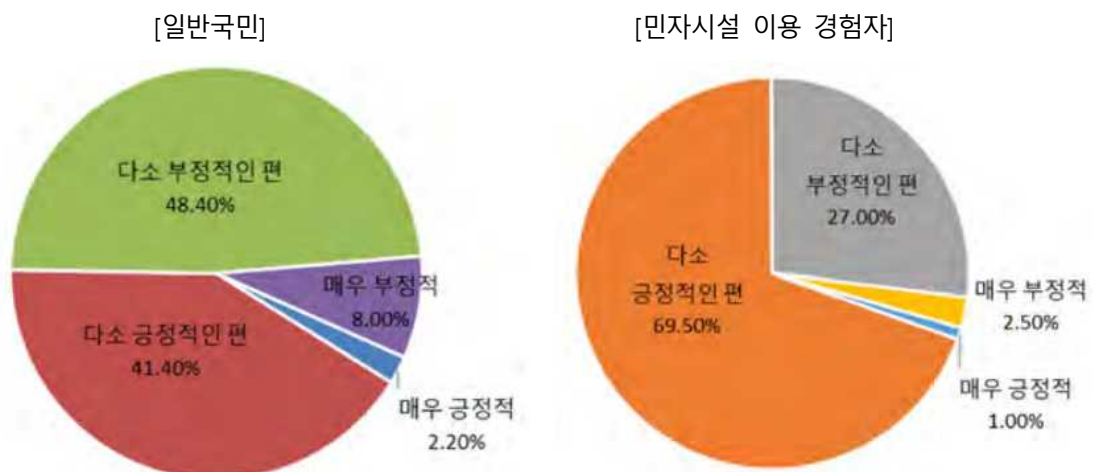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1) M1과 M2는 통화량 지표로 시중 유동성을 파악할 때 사용됨. M1(협의통화)는 은행통장에 있는 돈으로 당장 현금화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M2는 M1 + 예적금 등 이자를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만기 2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을 의미함.
2) 통화량 10% 상승 충격은 13개월 후 아파트매매가격을 최대 1.4% 상승시키고, 가격 상승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황관석 외,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국토연구원, 2022. 9. 5)

■ 민자 30주년,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 존재

-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올해는 민자사업 30주년이 되는 해임.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부정적 평가도 존재함.
- 민자사업은 교육, 환경, 국방, 복지, 도로, 철도 등 818개 사업에 총투자비 125.7조원(1992~2022년) 규모로 추진,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³⁾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했고, 민간의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공인프라 시장의 독점 해소와 서비스의 경쟁 도입,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민자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금 먹는 하마’, ‘특혜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 부정적 인식이 클수록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공무원은 민자사업을 기피하게 됨.
 -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정확하지 못한 사업비와 수요 추정에 따른 재정 낭비가 지적되면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됨.
 - 공무원 입장에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보다 복잡하고 시민단체·언론·의회의 비판적 시각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자 업무를 추진할 유인이 부족함.
 - 엄격한 비용편익분석과 적격성조사로 민자사업을 선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시 경쟁촉진, 수익발생 시 공공과 민간의 이익배분 등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있음.
 - 대국민 설문조사를 보면, 일반국민은 언론 등으로 인해 막연히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민자시설 이용 경험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 일반국민의 민자사업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자료 : 노승범 외(2017.11),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KDI, p119.

3) 2001~2015년간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액 172.8조원, 부가가치유발액 62.8조원, 취업유발효과 142만명, 재정부담 완화 규모 2.6조원 규모(노승범 외,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KDI, 2017. 11).

■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향적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은 교통수요를 관리할 수 없지만 공공은 IC 추가, 대체도로 개설과 같은 정책으로 교통수요 관리가 가능함. 교통수요 관리가 가능한 주체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민자사업의 추진 원칙 모색이 필요함.⁴⁾
 -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과 같은 추진방식과 관계없이 교통수요는 동일하지만, 민자도로의 경우 교통수요에 대한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
 -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은 정부가 통행량과 관계없이 해당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교통수요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대형(BTL)과 유사함.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도 AP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⁵⁾
- 민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위성·우주선·발사체계와 같은 우주산업, 원격 교육 및 치료, 이시스함과 같은 고가의 무기체계 등에 대한 민자사업을 적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이상기후에 따라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재해대비시설, 교량 등 노후 인프라 등의 성능개선에 민자사업 활용도를 높여야 함.
 - 1980~2000년대에 건설한 각종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고, 건설 당시보다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바 노후 인프라의 정비뿐만 아니라 성능을 대폭 상향시켜야 함.
 -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을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적기에 사업추진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바,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민자사업은 공공이 민간에게 특혜를 주거나 정부가 주도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인바, 이를 적극 반영하는 법률명 개정 검토가 필요함.
 - 주요국은 민자사업을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개념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조함.
 -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법률명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으로 ‘민간의 투자’를 강조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원칙 재정립, 대상사업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법령도 「민관협력법」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박용석(선임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4) 홍성필, “민간투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과제 : 교통부문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대한경제신문·법무법인 율촌, 2023. 11. 30.

5) 딜북뉴스(2022. 5. 28), “해외 민자사업에 뜨는 AP 방식”.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4.1~2024.2.)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yjjun@cerik.re.kr)·김화량 부연구위원

이슈 1: 건설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논의 확대, 향후 입법 증가 예상

- ◎ 최근 건설산업 경기 위축 및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구조조정·기업청산 등 위기 확대 우려로 건설공사 하도급자를 비롯한 자재·장비사업자 및 건설근로자 체불 예방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점검·제도 보완 검토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검토 결과 건설기업에 대한 위기 확대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률(하도급 계약금액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원도급액 중 하도급 부분 금액,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하도급계약 5,008건만 하더라도 102.3%에 달하는 평균 하도급률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원도급자의 지급 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합리적임.
- ◎ 건설하도급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서는 이미 원도급자의 체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임. 대표적으로는 ①발주자 직불제도와, ②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③ 공공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들 수 있음.
- ◎ 허나, 기존 운영 중인 원도급자의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들의 경우 제도가 가진 한계점(사각지대)이 존재하여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등의 보호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원도급자의 파산 등에 따른 압류·가압류 시 하도급자 등의 보호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 지적이 최근 대두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률이 10%로 고정되어 있어 기성 지급 기일이 긴 일부 민간 공사의 경우와 기성금 신청 후 잔여 기성에 대해 100% 보증이 불가능함. 이 외에도 보증기관별 상이한 약관 적용 및 보증 효력상실 시 대응방안이 부재한 문제 또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발주자 직접 지급제도) 발주자 직불 합의 이전 원도급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압류 시 대응력이 부재한 한계가 존재함(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경우 또한 법원에 별도 소명 완료까지 상당 기간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체불 발생). 또한, 하도급률 100% 초과 시 기성 지급을 통해 발주자가 원도급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잔여 기성·준공금에 대한 체불 발생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함.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현행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등의 지불 의무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되고 있고, 민간공사에서 활용 중인 노무비닷컴 등의 민간 시스템의 경우 거래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 더욱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사용 및 별도 전용계좌 운영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직불제와 같이 압류·가압류에 취약함.

- ◎ 이러한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최근 「신탁법」상 신탁제도를 활용한 채권신탁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해당 대안 또한 △과도한 운용 수수료, △신탁 방식 활용을 통한 이익이 발생치 않은 원도급자의 운용 수수료 부담이 적절성 여부, △신탁 체결이 가능한 원도급자가 대형기업 외에는 부재한 한계 등으로 인해 제도화에는 여러 난항이 예상됨.
-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작년 5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의안번호 제22425호) 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입법이 다시금 발의됨.
 - 김성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제26283호)은 발주자 직불제에 대해 민간공사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 직불이 의무화되어 있는 데 반해, 공공공사는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하도급자 및 기계장비대여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준수 여부 확인 의무 부여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위반 기간 상향(3년 → 10년), △공사대금 지급 보증 위반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 2천만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건설산업의 위기설 확대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여러 입법이 계속하여 발의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법 목적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제의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일례로 동일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체불e제로’ 시스템의 경우 가상계좌 체계 운용을 통해 원도급자의 압류·가압류 시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능이 부재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동일 문제의 해소가 가능함.
 - 이 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범위(10%) 내 하도급대금 체불 최소화 유도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약식기성 제도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체불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발주자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 등을 시행할 경우 해당 원도급자에게 시공능력평가액 상향, 정부의 상생협력제도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체불 최소화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이슈 2: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본회의 통과, 해외건설 활성화에 단비 역할 기대

-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다양한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 자본금이 지난 2014년 15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장기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그간 국내 기업의 대규모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어려움이 지속해서 발생함.
 -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최근 해외 각지에서 대규모 자원 조달이 필요한 대형 인프라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으로 금융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상황임.
 - 이번에 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은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 건설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건설산업 주요 관련 법률안 의결 및 공포('23.12.27.~'24.2.22)

법률명	주요 내용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444호(정무위원장 대안 의안)]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및 기술유용 손해액 추정 기준 강화('24.2.1. 본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①) 원도급자의 기술유용(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하도급자에게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부과(제35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개정②)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제35조의6 신설)
「교육 시설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224호(교육위원장 대안 의안)]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모듈러교실에 대한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여('24.1.9. 본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①) 교육시설에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및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 계기준 적용 의무 부여(제10조의3 신설) - (개정②) 임시교실(모듈러교실) 정의 및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 안전성 확보 의 무 부여(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4 신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188호(국토교통위원장 대안 의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24.1.9. 본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목적)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 해소 및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 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 (주요내용①)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의 효과적 개발을 통한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제1조) - (주요내용②)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해 특별법 적용(제3조) - (주요내용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법정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 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여(제4조 및 제6조) - (주요내용④)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철 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규정,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 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3조) - (주요내용⑤) 국토교통부에게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 부지를 「국유재산 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4조) - (주요내용⑥) 사업시행자의 철도지하화사업 필요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 발행 권한 부여(제15조) - (주요내용⑦)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제12조, 제16조, 제17조)

■ 건설산업 주요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3.12.27.~'24.2.22)

법률명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495호(박진 의원 등 11인)] ('24.2.5. 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우리 나라 수출 규모와 유사한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 확보 필요 - (제안방향)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액(안 제4조 개정)

법률명	주요 내용
「건설산업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283호(김성원 의원 등 10인)] ('24.1.12. 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①)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공공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니기에 하도급자 피해 발생 가능 - (제안방향①) 공공공사도 민간공사와 같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안 제35조 제1항) - (제안이유②~④)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하도급자 및 기계장비대여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 - (제안방향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실효성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 통보 의무 부여(안 제68조의3제6항) - (제안방향③)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위반 기간 상향(3년 → 10년)(안 제86조의4제1항) - (제안방향④) 공사대금 지급보증 위반 시 과태료 상향(5백만원 → 2천만원)(안 제98조의2제3호)
「산업안전 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240호(이주환 의원 등 11인)] ('24.1.9. 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개선 필요 - (제안방향)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 도모(안 제128조의3 신설, 제166조의2 및 제170조 개정)
「공정 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번호: 제26270호(김희곤 의원 등 11인)] ('24.1.12. 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한 공정행위의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통해 "사업자들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합의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는 그 개별적인 합의들의 기본원칙을 담거나 토대가 되는 기본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는 그 개별합의들이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절됨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예규상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 (제안방향)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통해 규정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일관성 확보와 법규의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40조제6항 신설) • [의안번호: 제26261호(김희곤 의원 등 11인)] ('24.1.11. 개정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배경)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 부과 중 - (제안이유①)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한다는 의견 존재 - (제안이유②) 낙찰자와 결탁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않는 방법으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입찰 경쟁을 방해한 사업자(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 (제안방향) 들러리 사업자에게 해당 입찰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